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미 FBI 방식 인사검증과 국정원의 역할

[발제자] 조경환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일 시] 2022년 10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Google Meet 온라인 세미나



☒ 문자 후원

#7079-4545

제408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역대 정부에서 많은 인사검증 실패가 있었다. 국민의 높아진 도덕성 기준과 부실검증으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가 있었다. 정쟁의 요인으로 최근에는 야당 반대로 취임이 무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인사실패는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 탓도 있지만 도덕적 흠결의 부적격 인사 추천 및 대통령의 뜻을 의식한 느슨한 검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국정원은 2022년 9월 신원조사 내실화 TF를 가동했다. 법무부 인사검증 업무와는 별개로 국정원법,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거하여 신원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자의적 조사는 불가하며 국가기밀취급 인원에 한해 관계 기관장 요청시 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 고위직 인사 검증은 정보의 영역이다. 검증된 존안자료를 바탕으로 인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정부 기관망을 통해 기본사항을 체크하고 분석, 판단해야한다. 인사 자료 축적과 상시 신원 정보 수집은 검증의 지속성과 실효성의 요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인프라의 불법적 활용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고위직 인사검증과 체계

- ◆ 인사 청문회법은 2000년 6월 23일에 제정되었다. 2010년에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을 개선하여 현재와 같은 인사검증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고위직 공무원이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정책 결정과 집행의 책임이 있는 관리층 또는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한 인사 혹은 임명직을 말한다. 검증 유형은 국회 인사청문과 국회 동의·선출직, 인사청문직 청문 없는 행정부 고위직, 재산 등록 고위직이다. 인사검증은 시스템을 통해 임용후보자의 자질이나 직무역량, 도덕성 등을 종합하여 점검하는 대통령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있다.
- ◆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체계는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일을 부처의 통상업무로 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자료를 보전하게 함으로써 연속성을 확보했다. 추천은 대통령실에서 하고 검증은 법무부에서 하는 검증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했다. 대통령 임명직·위촉직 인사는 인사혁신처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과 법무부장관에 위탁했다. 이에 근거해서 6월 7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업무를 시작했다.
-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급 단장 1명, 사회분야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인사정보 1담당관,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2담당관이 있다. 이 밖에 검사, 경정급 경찰, 각 부처 파견인원 2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검증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①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 공직 예비후보자 3-5배 추천
 - ②예비후보의 정보제공동의서, 사전질문서(200여개) 접수
 - ③행정.재산.납세.범죄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받아 답변서와 대조
 - ④경찰통한 평판, 비위, 추문 등 수집 및 관리단의 주변인과의 통화, 직접 탐문 후 검증보고서 작성(1차 검증 완료)
 - ⑤법무장관 보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관, 최종 점검
- ◆ 검증 대상은 1만여 고위직을 상시적으로 검증한다. 전과나 재산축적 등 행정데이터, 사전질문 답변서 및 미확인 첩보 탐문, 조사, 확인 등의 프로세스를 거친

다. 회색지대의 영리행위, 전문 분야의 논문해석과 이해충돌 판단을 비롯해서 숨겨있거나 덮여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밝혀내야한다. 그러나 세평과 능력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분간이 쉽지 않아 속성상 제약이 많다.

- ◆ 역대 정부에서 많은 인사검증의 실패가 있었다. 국민의 높아진 도덕성 기준과 부실검증으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지명 철회, 자진사퇴가 있었다. 최근에는 야당 반대로 취임이 무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인사실패의 원인을 들면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자를 걸러낼 결기부족과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 탓과 함께 도덕적 흠결의 부적격 인사 추천 및 대통령 뜻을 의식한 느슨한 검증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 인사검증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질적 문제로는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관념 부족, 집권세력의 제 식구 보상, 절차적으로 짧은 인사검증 기간, 자료 미제출,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강제수단 부족, 후보자의 허위진술 등이다. 특히 당파적 접근과 야당·언론의 도덕성 검증 치중은 인사검증을 더욱 어렵게 한다. 검증기관의 적격성 논란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 이후 경찰의 세평 수집 역량과 부작용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인사권 행사는 정부조직법 상 임무 밖이다. 18개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전 부처 장·차관 후보 검증은 견제균형 위배다. 사법부의 요인 검증은 3권 분립의 훼손이다.

◆ 미국의 인사검증 시스템

- ◆ 미국 대통령의 인사검증은 애초에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경향이다. 범죄 사실, 도덕성의 문제, 상원의 인준거부 소지가 있는 자는 후보자 인선에서 제외한다. 특히 상원의 인준거부는 대통령 불신으로 간주한다.
- ◆ 미국 고위직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을 검증 책임기관으로 하고 검증 실무전담기관으로 FBI(연방수사국)의 전담부서가 전 분야를 조사한다. 지명예정자에 검증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을 요구하고 몇 가지 정해진 검증사항을 조사한다. CAL(A)B FAD라는 것으로 성품, 동료/소속단체, 평판, 충성심, 직무 수행능력, 편견, 경제적 책임감, 재산관계, 음주 약물 오남용을 말한다.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사실만 조사하며 추가적인 판단은 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통령 지명 공직후보자 중 99% 인준 성공했다.

◆ 한국 국정원의 인사검증

- ◆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적폐청산’을 빌미로 인사검증 기능을 정지시켰다.

2017.6월 국내외 종합분석 및 국내수집부서를 폐지하고 기관출입을 중단했다. 이후 고위공직 후보 세평 수집 등을 경찰이 수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14일 관훈 클럽 토론회 때 “국정원 정보라도 인사 검증에 동원”해야한다고 했다. 야당은 국정원의 인사정보 공유, 검증 참여를 ‘사찰’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히 여전하다. 게다가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정상적 존안자료를 불법 ‘X파일’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국정원은 2022년 9월 신원조사 내실화 TF를 가동했다. 법무부 인사검증 업무와는 별개로 국정원법,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거하여 신원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자의적 조사는 불가하며 국가기밀취급 인원에 한해 관계 기관장 요청시 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 ◆ 고위직 인사 검증은 정보의 영역이다. 검증된 존안자료를 바탕으로 인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정부 기관망을 통해 기본사항을 체크하고 분석, 판단해야한다. 이는 국정원의 인사검증자산으로 활용한다. 인사자료 축적과 상시 신원정보 수집은 검증의 지속성과 실효성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인프라의 불법적 활용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